

## [성명] 맹탕 대책을 재탕 삼탕한 윤석열 정부 산재예방 지원 대책. 국민의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 중단하라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50인미만 중대재해 지원 대책은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대재해 예방지원 대책을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발표 대책도 2024년 사업으로 이미 제출하고 추진했던 대책이고, 3차에 걸쳐 더불어 민주당에 제출했던 대책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당정협의, 범 부처 대책이라는 포장지에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참석시켜 발표한 것이다.

첫째, 2024년 산재예방 예산이라는 1조 2천억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예산과 동일하다. 예산에는 중소기업 용자 예산 4,586억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년보다 용자예산을 1,000억을 늘려, 직접 사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사업 예산은 공동안전보건관리 지원 명목으로 협회나 단체가 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설명회등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은 삭제되었다. 예산에는 이미 실패한 원하청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원청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만 확대했다.

둘째, 정부가 진행하겠다는 사업은 지난 3년간 약 40만개 사업장에 진행했다는 기술지도, 사업주 교육, 컨설팅 사업이다. 이미 3년 동안 진행하고도 경영계의 주장처럼 80%이상 사업장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동일한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숫자와 물량공세만 늘어놓고 있다. 기술지도, 사업주 교육, 컨설팅은 일회성 사업이며, 컨설팅을 모든 사업장에 진행하려면 수십년이 걸리고,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단기간 건설공사로 현장이 생기고 소멸하므로 컨설팅 완료 자체가 불가능하고, 컨설팅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셋째,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 민간 재해예방기관, 교육기관 활성화, 이주 노동자 중대재해 등등의 대책은 이미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재탕 삼탕이다. 로드맵의 핵심 사업으로 2023년 8월로 법 개정 시기까지 못 박았던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은 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노동부가 다시 로드맵의 대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누누이 강조한 <노사자기규율> 조차 사라지고, 양대 노총은 빼고 사업주 단체만 참가시키는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결성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상설 TF 운영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 순위로 발표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또 어떠한가? 노동부는 이미 연초에 8만개 사업장을 고 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통보했는데, 여기에 83만개 사업장을 더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강제성도 없이 2개월 안에 83만개 사업장 자체진단을 한 것을 기초로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주 민주노총이 전문가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의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 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68%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에서도 51%가 내년부터 적용에 찬성해 적용유예 연장 응답인 44%보다 높았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 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이 쏟아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적용유예 연장 반대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라.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정부대책 분석

### 1. 기본 특징

- 2022년 발표하고 시행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등 기존 대책 재탕 삼탕 대책
- 기존의 산재 예방 대책 예산과 동일하고,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
- 신규 대책도 2024년 정부예산과 계획에서 이미 제출되고 추진했던 것 재탕
- 민주당 정책위에 제출했던 내용과 동일하고,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채용 시 지원은 삭제 됨

### 2. 주요 내용

○ 산업안전 대진단은 2023년 산안감독 계획 발표 시 이미 선정한 8만개 사업장이 기본임. 83만개 사업장이 강제성 없이 2개월안에 자체진단하는 것을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포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투입 되었던 산재예방 예산과 총액 규모 변동 없음  
 -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이후 2021년 1조 1천억, 2022년 1조 2천억, 2023년 1조 2천억  
 - 정부주장 3천억 간접 예산은 건설업 산안관리비 제도 확대 등으로 간접 예산으로 보기 어려움  
 - 타 부처 사업은 중기부 등의 바우처 사업등이 거의 유일한데 100개 사업장에 불과하고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음

○ 산재 예방 예산 중 중소기업 용자 예산 비중을 높였고, 직접 예산은 오히려 감소  
 - 23년 3천564억 용자에서 24년 4,586억으로 용자 증가. 총액이 변동 없는 상태에서 용자만 1,000억 증가하여 직접 예방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

○ 지난 3년 동안 실효성 없었던 사업과 예산 반복  
 - 기술지도, 사업주 교육, 컨설팅 등 지난 3년간 약 40만개 사업장에 실시했다는 사업과 동일

○ 신규사업인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지원은 협회나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600명에 불과함. 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설명회등 지원, 사업장 직접 지원 아님.

○ 안전보건 인력 양성 관련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때 이미 발표한 대책. 학과 신설, 진흥법 제정 등 추진실적이 없는 대책 재탕, 그 외 대책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

○ 실효성 없는 원하청 상생협력 사업 예산 확대, 원청의 노조, 노동자도 부담하는 방식의 매칭 사업이나, 원청을 지원하는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중 원하청 관계가 없는 단독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원청기업 지원만 확대하는 것

○ 매년 100명이상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도 십수년 진행한 대책의 반복

구분	정부 대책	기존 대책	정부 대책 문제점
예산	- 2023년 1조 2천	- 2021년- 2023년 매년	- 중처법 제정 이후 산재

	<p>억. 간접 3천억 포함 1조 5천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4,586억 중소기업 용자 예산 포함</li> </ul>	<p>정부 산재예방예산 1조 천억- 1조 2천억 내외</p>	<p>예방 예산과 총액 변동 거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예산 전년대비 1,000억 증가로 직접 사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li> <li>- 신규증액 예산은 120억 내외 (공동안전보건관리자 600명)</li> <li>- 민주당 정책위 제출했던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채용시 비용지원은 삭제되었음</li> </ul>
<p>산업안전대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 자체 진단</li> <li>- 8만개 중점관리. 일반사업장 선정</li> <li>-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li> <li>- 규제개선 과제 범 정부 실무 TF 수시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산안감독 발표. 8만개 고위험 사업장 이미 선정, 사업장에 고위험 사업장 선정 통보. 기존 대책과 동일.</li> <li>- 2개월 동안 83만개 사업장이 자체진단 하는 것만 추가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만개 중점관리 사업장에 컨설팅, 시설개선, 공정개선/ 일반 사업장에 교육, 기술지원등 일회성 사업 재탕. 물량 중심 사업 기조 유지</li> <li>- 노사자기규율 체계 강조에서 민관합동추진단에 노동조합은 제외, 기업및 협회만 참여</li> <li>-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 사항 통로 공식 개설</li> </ul>
<p>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 지원</p>	<p>컨설팅 2024년 2.7만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2023년 2년 동안 1.7만개소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과 체계 구축 연동 안 되고 있으나, 재탕 삼탕 대책</li> <li>- 이주 노동자 기존 대책 재탕</li> <li>- 중기부 제조업 바우처 100개 사업장에 불과</li> </ul>
	<p>26년까지 2만명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중대재해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 자격완화는</li> </ul>

	력양성. 학과신설	로드맵 발표와 동일. 학과 신설등 추진 실적 없음	이미 시행 중임
	지역, 업종별 공동 안전관리전문가 선 임 지원 600명	- 산단에 공동안전보건관 리자 선임 지원	- 경제단체의 공동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순회 설명회, 산단의 안전관 리 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변경.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산단의 직접 안전점검과 관리 강화 사업은 실종되고 간접적 방식 강화
원하청 상 생 협력	- 원청 노사 출연 격차 완화 활용 시 정부 매칭 지원 - 모기업이 협력업 체 지원시 소요비 용 50% 정부 분 담 - 원하청 상생협약 시 컨설팅 지원 - 원하청 가이드라 인 마련 보급	- 기존 대책과 동일 유사 사업, 예산확대	- 원청기업의 노동조합이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 - 원청의 산안법, 중처법 상 의무사항을 정부 지 원 확대 하고 있음. - 상생협약 컨설팅은 하 청 기업에는 실효성 없 는 사업으로 확인되었 으나 지속 추진 확대 - 원하청 가이드라인이라 는 명목하에 원청 책임 축소 및 완화 추진
기타	- 안전보건산업 진 흥법령 제정 검토	- 로드맵, 경사노위 회의 에서 논의되었으나 추 진실적 없음	- 추진 발표 1년 지났으 나 여전히 '검토', 세 부 내용 마련도 없음
	-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 안전보건 제품, 서비스 시장 확대 등 이미 기존에 발표하고, 실질 추진 실적이 미미한 대책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우선 대책이었던 <위험성 평가 미 실시 처벌조		

	<p>항 도입&gt;은 2023년 8월말로 개정 일정까지 제시되었으나, 개정법안 국회 제출도 하지 않고 실종됨. 정부 발표 대책의 상당수가 &lt;검토, 추진&gt;으로 되어 있음.</p>
--	---